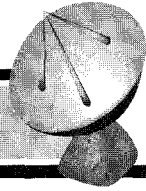


## 한우인테나 - News



## ◎ “키워봐야 손해”… 묻지마 출하



“사료값은 계속 오르는 데 소값은 떨어지고 어떻게 더 버틸 수 있습니까.”

최근 한우 출하물량이 크게 늘고 소비 부진현상마저 심화되면서 큰 수소값이 3년여 만에 300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등 소값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더구나 산지에 적정 출하시기를 놓친 한우가 많아 소값 파동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협중

양회에 따르면 18일 생체 500kg 기준 큰 수소값은 2백88만천원으로 2001년 1월 수준(2백80만7천원)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18일 오전 11시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 내 출하 대기장. 소를 실은 트럭이 줄지어 선 가운데 출하농가 등이 소를 내리느라 여념이 없다. 공판장의 한 관계자는 “한달 전부터 서울시가 정한 하루 평균 도축 마릿수인 230마리보다 갑절이나 많은 400~500마리의 소가 출하되고 있다”며 “일부는 하루를 더 기다리다 도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인근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 생산관리부장은 “그동안 소값 추이를 관망했던 물량이 과체중에 따른 품질 저하와 울 들어 20% 가까이 오른 사료값 부담 등으로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쏟아져 나오는 것 같다”며 “출하 체중이 700~900kg으로 정상적으로 출하된 소에 비해 100kg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정부가 적정 생산비를 보장하도록 수매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 촉진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해 한우값 안정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정부가 1996~1997년 240만원 이하 때 가축시장에서 수매를 실시했듯이 이번에도 값 하락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체화된 한우 물량을 수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지에 적어도 4만5,000여마리가 체화돼 있다는게 남회장의 설명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올 1~4월 말까지 한우 도축 마릿수가 8만7,500여마리로 전년 같은 기간의 13만3,400여마리에 비해 34%나 줄어든 것도 산지에 체화된 물량이 많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와

함께 농가도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당초 계획대로 출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와 축산기업조합중앙회를 통해 소비자판매가격 인하를 적극 유도해 소비를 활성화시키므로써 산지 소값 안정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민신문 5월21일자]

### ◎ 한우자조활동자금 8~10월중 대의원 선거



한우자조활동자금 대의원 선거가 오는 8~10월중에 실시된다.

한우공동자조활동자금설치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신용덕·우영목)는 지난 3월 17일 농협중앙회 9층 회의실에서 제 3차 회의를 개최, 이같이 결정하고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실무협의회로 위임했다.

이날 위원들은 또 도별 순회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지역별 분위

조성에 효율성을 기하고 자조활동자금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를 유도 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순회선거를 실시기로 한 것.

위원들은 대의원 선거 비용의 경우 예상선출구 1백65개소중 70~80개소는 농협과 한우협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선출구는 농협중앙회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 소요 예상액 1억2천5백여만원 중 농협이 9천8백여만원을 한우협회가 2천7백여만원을 담당하게 된다.

[축산신문 3월24일자]

### ◎ 소비자 80% "생산이력제 희망"

소비자들은 생산이력제를 통해 수입산 여부 및 가축질병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청장 김영욱)이 최근 전문조사기관인 리더스컨설팅그룹과 공동으로 서울지역 31~55세 가정주부 6백명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생산이력제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할 정보로 수입산 여부 및 가축질병 정보가 각각 32.3%,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생산이력제 도입시 얼마나 더 가격을 지불할 의향조사에서는 5~10%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축산신문 3월26일자]

### ◎ 수입생우 도축부진...적체 심화

수입생우의 도축두수가 쇠고기 소비부진과 가격하락 등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난 2002년 들어 온 563두의 생우가 19개월 가량이 지난 아직까지도 전량 도축되지 못하고 일부가 남아 있으며 지난해 1월과 3월·5월경에 들어온 생우 2천5백여두도 출하시기가 되었으나 이중 2천여두가 도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해 10월경 들어온 미국산 생우 860여두와 올 들어서도 2차례에 걸쳐 1천7백여두가 추가로 들어와 현재 전체 수입 생우 사육 두수가 4천5백여두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올 하반기에는 적체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수입생우 도축이 부진한 원인은 지난해 1월 수입돼 전북 진안군과 무주군에서 사육되던 수입 생우 840여두 중 1백여두가 지난해 말 도축되어 서울공판장 등에 일반 상장되었으나 국내산 육우 가격보다 크게 낮은 지육 kg당 평균 4천5백원대를 받아 두당 70만원 이상 크게 적자를 내서 일반 상장을 더 이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3월과 5월경 들어 경북 경주와 경남 해남 등지에서 사육되고 있는 수입 생우도 일반 상장 경매는 하지 않고 농원식품 등에 의해 지육 kg당 평균 8천원대에 경락되고는 있으나 마트나 판매장을 통해 일부 판매되고 있는 수입생우 '설록우'의 판매량이 적어 출하시기에 있는 생우들을 도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신문 4월2일자]

###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절실"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 의무화 실시를 정책사항으로 채택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3월 29일 음식점 내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의 원산지표시제 의무화 실시를 선거 정책사항으로 채택해 줄 것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에 건의했다.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제 의무화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축단협은 축산농가 보호와 국민 건강권 및 식생활 증진을 위해 한우고기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모든 축산물에 대해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음식점 내 쇠고기 원산지표시 의무화는 지난 2000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으로 무산된 바 있으며 지난해 4월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식품위생법 개정안마저 관련 이익단체의 반발로 심의가 유보되어 16대 국회종료와 함께 사문화 된 상태이다.

[축산신문 4월6일자]

### ◎ 한우능력평가대회 10월중 개최

올해 한우능력평가대회가 오는 10월 중순에 개최기로 결정됐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박순용)와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3월 31일 대구전시컨벤션



은 축산물브랜드전시회 개최되는 동안 aT센터 홍보관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축산신문 4월6일자]

### ◎ 수입축산물 관세 촉발기금으로



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2004년 회비 거출액 결정안에 대해서는 협회의 사정에 따라 차등납부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수입·지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기타안건으로 신축산회관 건립 문제와 한국 염소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한편, 5월중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법제화를 위해 소비자단체장 및 축산전문지사장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축산신문 4월26일자]

### ◎ “사료업계 구조조정 나서라”

축산농가들은 두 차례에 걸친 사료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사료업체들이 5월 중 약 6~8% 정도의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자 자구책 마련 없이 농가들의 목만 조이고 있다며 구조조정이 이

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A 사료업체의 관계자는 “사료회사들의 구조조정이 되지 않는 것은 원료를 외상수입해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고 환차 이익도 발생하기 때문이다”면서 “부도 위기를 맞은 업체라도 거래처의 미수금을 모두 회수하는 방법을 동원하는 등 완충 자금여력이 있어 사료회사의 도산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사료를 현금으로 거래하면 공장도가격보다 15~30%까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외상 거래는 1개월당 1.5~2%씩 사료가격이 가산돼 사료업체들의 수익구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민신문 5월6일자]

### ◎ “사료업체 장려금 대신 할인을 확대 적용해야”

사료가격의 투명화를 위해 사료회사가 농가에 주는 장려금 대신 할인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축산농가들에 따르면 사료거래 계약시 할인율과 함께 결정되는 장려금은 사료회사가 농가의 사료사용실적에 따라 톤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농가들이 월말 정산을 통해 이를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단가표에는 할인율만 표시되고 있어 많은 농가들이 실질적인 사료가격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려금을 받게 되면 소득세를 납부하게 돼 있어 할인을 더 적용받는 것보다 손해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같은 현상은 사료회사들이 경쟁회사에 사료가격을 노출하지 않을 수 있고 연체료가 있는 농가의 이자 등을 장려금으로 손쉽게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사료업체들이 장려금 지급 대신 그 지급액만큼 할인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려금 대신 할인을 확대하면 사료가격이 모두 노출돼 농가별로 정확한 사용가격은 물론 타업체간의 가격 비교도 가능해 사료가격이 투명화되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사료업체들은 장려금 제도 대신 할인폭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농어민신문 5월10일자]

